

김두섭(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258쪽.

한국의 경제위기와 출산력 변화

이성용*

I. 들어가는 말

얼마 전 2006년 합계출산율이 약간 반등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지만, 한국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초저출산율(2004년 1.16, 2005년 1.08)을 기록하였다. 2007년 인구기금보고서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홍콩 0.95명, 우크라이나 1.14명, 슬로바키아 1.18명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에 1997년 후반의 외환위기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또 그러한 경제 불안정은 출산, 결혼, 이혼, 실업, 여성지위 등과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이 《IMF 경제위기와 한국출산력의 저하》의 가치를 높인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펴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은 관련 이해집단의 주먹구구식 요청에 의해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저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초저출산을 야기한 인과 구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한국 출산력에 대한 인과 기제를 분석하기 위해 저자는 매우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90년과 2000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원자료, 1990년, 1997년, 2000년, 2004년 출생신고 원자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원자료이다. 한편, 이 연구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조교수

첫째,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20-49세 기혼여자들을 추출하여 출산수준, 차별출산력 양상 및 인과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1990년, 1997년, 2000년, 2004년의 출산신고 자료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출산수준과 차별출산력이 변하는 추세를 분석하고, 더욱 정교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997년 이후 결혼한 고학력 대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을 하였다. 셋째, 2003년 전국출산력 자료에서 20-49세 기혼여자들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가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다른 인과구조를 지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1997년 이전에 결혼했거나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재혼한 여자들의 집단과 1997년 및 그 이후에 처음 결혼한 여자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두 집단의 출산력 수준과 출산형태를 비교분석하였다.

II. 단위별 내용과 서평자 의견

이 책의 주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인 경제위기 이후 초저출산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연구자료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제2장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 이론과 선행연구에서는 소득, 교육, 직업, 여성의 경제활동, 거주지 등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위인 소득과 출산 수준에서는 소득과 출산수준 간의 관계, 이를테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그 관계가 단순 선형관계가 아니라 3차 곡선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자녀의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리벤스타인(Libenstein)의 이론, 자녀의 질에 대한 욕구를 강조한 베커(Becker)의 미시경제이론, 먼서(Mincer)의 기회비용이론, 상대소득이론 그리고 저자의 연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 단위인 교육과 출산수준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향상된 여성의 시간 가치는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 가치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그 결과 출산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세 번째 단위인 직업과 출산수준에서는 분석지표로서의 직업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직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은 출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네 번째 단원인 부인의 경제활동과 출산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수준에 부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이러한 현상은 출산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다섯 번째 단원인 거주지와 출산수준에서는 대부분 사회의 출산력 변천이 도시화에 의해 촉진 혹은 초래되었고, 한국도 출산력 급속한 저하가 도시화 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본다. 또 경험적 연구도 출산행위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3장은 한국의 인구변천과 출산력 변천에 대해 개괄적인 논의를 하였다. 저자는 지난 1세기 동안 한반도 인구의 변화양상을 제1단계 전통적 성장기(1910년 이전), 제2단계 초기변천기(1910-1945년), 제3단계 혼란기(1945-1960년) 제4단계 후기변천기(제1차 출산력 변천이 완료된 단계), 그리고 제5단계 후기과도기와 제2차 출산력 변천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인구변천 이론은 사망력과 출산력이 모두 하강하는 단계로 완성된다. 그러나 제2차 인구변천(제2차 출산력 변천이론)은 출산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하강된 뒤에도 계속 하강되는 추세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제4장은 IMF 경제위기가 영향을 미친 한국사회의 취업구조와 고용불안에 대해 분석하고, 그러한 변동을 초저출산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6-9%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9%로 곤두박질하였다가 그 후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률만을 보면 외환위기가 극복된 것처럼 보이나, 그 극복과정은 우선적으로 취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 이래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임시노동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외환위기는 임금노동자(특히 여자)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또 취업자 수도 남정보다 여성에게서 크게 감소하였다.

외환위기는 신문에서 크게 떠들었던 은행원과 같은 전문관리직보다 남자의 경우는 생산관리직, 여자의 경우는 서비스와 사무직 취업자의 수를 감소시켰다.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고용불안정과 함께 사회불평등 및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게다가 외환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정(특히 청년층의 실업증가와 노동시장 불안정)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연기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4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률,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젊은 세대의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출산력의 전반적인 변화추이와 그에 대한 인과구조를 제시한다. 저자는 1960-1985년 제1차 출산력 변천과 그 이후의 제2차 출산력 변천의 인과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논의한다. 제1차 출산력 변천에서는 일제식민지 시절 농촌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과잉인구를 배출하기 위한 인구가동이, 그리고 1960년대 이후는 높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출산력에서 통제출산력으로의 변천이 있었다. 그 변천에서 혼인연령상승과 가족정책의 피임 보급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저자는 맬서스의 균형이론 접근방식에서 제1차 출산력 변천의 인과구조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력 저하에는 경기 후퇴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시장,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이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력 저하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혼인연령은 계속 상승하여 젊은 여성들의 유배우자 비율이 계속 감소하며, 개인주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제6장 차별출산력의 미시분석은 이 책의 핵심적인 발견들을 제시한다.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의 2% 표본(20-49세 기혼여성), 1990년, 1997년, 2000년, 2004년 출생신고자료,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 자료 등을 통해 개인의 교육수준, 직업, 경제활동상태, 소득, 거주지, 계층 등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변화양상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분석하였다. 출산력 지표로는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Children Ever Born, CEB)를 사용하였다.

저자는 분석결과를 자료별로 제시하였지만, 서평에서는 변수별로 자료의 분석 결과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는 자료별 분석결과와 일치점과 차이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저자는 교육수준과 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자료, 출생자료 및 보사연 출산력 자료를 사용하였다.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분석 결과, 부인의 교육수준은 출생과 거의 직선형태의 부적 관계를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은 1990대 초저출산율에 저학력 부인들의 출산력 저하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센서스 자료 분석 결과이다. 저학력 부인의 출산력이 고학력 부인보다 낮아진 이유에 대해, 저자는 “IMF 경제위기와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좀 더 컸”고 “부인의 교육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출산력이 더 낮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히 낮은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었(117쪽)”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출생신고자료도 이러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며, 남성보다 여성이 보다 뚜렷이 보여준다. 그러나 무학과 초등학교 등과 같은 저학력 여성의 출산력 수준이

1990년 센서스에 비해 2000년 센서스 자료 분석결과에서 낮아진 것은, 어쩌면 1990년 센서스 자료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코호트인 1940-1949년생의 여성들이 2000년 센서스 분석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코호트의 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던 1960년대에 가장 왕성한 출산 행위를 보였으며 저학력 여성들의 비율도 높다. 또 최근 코호트의 저학력 여성(이를테면, 1990년 센서스 자료 분석에는 없지만 2000년 센서스 자료 분석에 새로이 포함된 1970-1979년생의 여성들)은 이전 코호트의 저학력 여성(이를테면, 2000년 센서스 자료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990년 센서스 자료 분석에는 포함되는 1940-1949년생의 여성들)보다 출산율을 낮추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및 이데올로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이 책은 자료 분석의 해석에서 이러한 코호트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출생아수와 교육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보사연 자료 분석 결과는 센서스와 출생자료 분석 결과와 비슷하지만,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와 교육수준간 관계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갈수록 1998년 이후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다가, 대학졸업자에 이르러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자는 이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행위를 가장 민감하게 변화시킨 집단은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부부라 할 수 있다. 이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낮거나 하층 집단에 속한 부부들에게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절실했음을 반영(162-163쪽)”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저자의 설명과 같이, 교육수준과 출산간의 관계가 외환위기이후에 바뀐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이를테면 종속변수를 총출생아수 대신 출산간격을 고려한 출생으로 하여 사건사분석을 행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결혼한 부부의 결혼기간으로 인해 일어나는 오른쪽 찢림(right censoring)이란 방법론적 문제점이 해결되고 이로써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직업과 출생아 수의 관계 분석에도 위의 세 자료 모두가 사용되었는데, 이들 모두에서 직업위세는 J자형을 보인다. 출산수준은 가장 직업위세가 낮은 단순노무직 농어업이 가장 높고, 직업위세가 높아지면서(사무직,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 출산수준이 감소하다가, 직업위세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집단의 출산수준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문가 집단보다 높았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1998년 이후 총출생아수를 분석한 보사연 자료 분석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 저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행위를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집단은, 농업과 단순노무직처럼 직업위세가 낮은 직종, 그리고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과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출산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서비스, 판매, 기능직에 종사하던 부인들의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떨어졌(165쪽)”다고 설명한다. 또 저자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부부의 종사상 지위별 출생아수 분석을 통해,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고 판단된다(166쪽)”고 주장한다. 즉 외환위기 이후의 초저출산은 과거 출산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집단의 출산율 하강으로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교적 높은 출산력을 보였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 비해 외환위기가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흥미로운 발견은 직장 유형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분석이다. 교육,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별출산력 분석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대체로 출생아수가 유사한 형태를 보인 반면, 직장 유형별 분석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직장 유형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최근의 출산수준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부인의 순서로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높은 실업률과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이 가장 안정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간주되는 현상이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규모와 최근의 출산수준이 반비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직장유형에 따른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소기업 종사자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민감한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사업체 종사자의 최근 출산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이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해석하게 한다(167쪽).”

저자는 여기서 끝을 맺고 있다. 흥미로운(최소한 논평자에게) 다른 발견들에 대한 해석이 없다. 이를테면 왜 혹은 어떻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이 가장 높은 출산수준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반대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지, 공무원/교사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남편과 부인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총출생아를 보이는 반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부인은 왜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지, 그리고 개인사업체와 기타는 그보다 덜 격차를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외환위기 이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여성이 전업주부로 남아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족 해체의 증가는 여성이 남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아이를 키우는 전통적 자녀 양육방식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남편 도움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능력이 있는 반면, 보수가 낮고 불안정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자립적으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이혼율의 증가와 보다 심각해진 개인주의가 이러한 여성의 직장 유형에 따른 출산행위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마, 외환위기 이후에는 안정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만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점점 더 강하게 조성되고 있을지도 모른다(여성계와 보건사회부의 출산장려정책도 이러한 환경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생아수 간 관계는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서, 20-49세 기혼여성 전체를 보면 1990년 센서스와 2000년 센서스 모두에서 경제활동을 하는(혹은 일하는) 부인이 전업주부(혹은 일하지 않는 부인)보다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도시 고학력자만 따로 분석해 보면,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보다 높은 출생아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저자는 “부인의 경제활동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고학력으로 대도시 근대부문에 일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착되고 있다고 결론(123쪽, 219쪽)”을 내린다. 이러한 해석에서 저자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사이의 쌍방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가 많으면 자녀의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서구 국가와 달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간의 관계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특성과 코호트에 따른 이러한 특성의 변동을 위의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와 출생아수 간의 관계는 센서스와 출생신고 자료에서 분석되었다. 1990년 센서스 분석 결과는 전라북도과 전라남도가 가장 높은 출산수준을, 그리고 인천이 가장 낮고 경기도, 서울 순으로 낮다. 2000년에도 비슷한 추세이나, 출산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 서울, 경기도, 인천 순으로 바뀌었다.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는 출산수준이 낮았다. 1990년과 2000년을 비교할 때, 1990년 출산수준이 높았던 지역에서 10년 동안 출산수준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의 순서로 출산수준이 10년간 크게 떨어진 반면 출산수준이 낮았던 인천과 경기도는 감소폭이 작았다. 광역시 가운데는 출산수준이

높았던 광주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 결과 2000년 센서스에서는 지역별 출산 수준 편차가 199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출생신고 분석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회귀모형 분석에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뒤에도 생태환경 변수가 출산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의 생태학적 특성이 개인적 특성 못지않게 개인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계층과 소득 간의 관계는 보사연의 출산력 자료에 의해 분석되었다. 계층의 지표로 가구총소득, 재산소득, 주관적 계층이 사용되었다. 출산수준과 가구총소득의 관계는 V자형이다.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출산수준이 낮아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의 증가는 출산의 증가로 나타난다. 가구총소득의 누적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재산소득도 가구총소득과 유사하게 V형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계층에 따른 총출생아수는 대체로 완만한 V 혹은 U자형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의 출산수준은 독특한 양상을 띠는데, 계층이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완만하게 높아지다가 상층에 이르러 다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과 이후에 여성들로 나눈 뒤, 재산소득과 출산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재산수준과 총출생아수 간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이후에 결혼한 여성에게는 재산수준이 높을수록 총출생아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주관적 계층과 총출생아수 간의 관계도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에서 그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7년 이전 결혼한 집단에서는 최상위 계층의 총출생아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층에 따른 편차는 미미하다. 하지만 1997년 이후의 초혼자 집단에서는 “계층이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약간 상승하다가, 중간계층에서 완만하게 낮아지는 형상(179쪽)”을 띠는 뒤집어진 J자형을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에 비해 경제적 요인들이 출산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초저출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인 혼인연령의 분석에는 출생신고자료와 보사연 자료가 사용되었다. 혼인연령의 상승은 2005년에 그 이전까지 가장 높은 출생아 구성비를 보여주었던 연령대를 25-29세에서 30-34세로 바꾸었다. 그런데 출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수준별 결혼연령을 분석한 결과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게다가 1997년 이전과 이후에 혼인한 집단을 비교 분석한 보사연 자료의 분석 결과도 남성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학력수준에 따른 결혼연령이 편차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는 출생신고 자료와 마찬가지로 고졸이 가장 낮고 다음이 대졸 그 다음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결혼연령이 높아가는 V자형을 보인다. 또 두 자료 모두에서 시간이 갈수록 모든 교육수준에서 결혼연령이 상승하는데, 이 추세는 대졸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들에게서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이 점차 결혼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교육수준에서 결혼연령이 상승했다. 출생신고 자료 분석에 의하면, 남성과 달리 중졸을 중심으로 V자형을 보이며, 1990-2004년 사이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결혼연령 상승폭은 남성의 상승폭과 거의 유사하다. “즉 고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결혼연령 상승폭은 남녀가 비슷한 데 비해, 저학력자의 경우에는 남자 결혼연령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149쪽).” 보사연자료 분석 결과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은 학력이 높아갈수록 결혼연령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지만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의 결혼 연령 패턴은 출생신고 자료 분석과 마찬가지로 V자형을 보인다. 이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최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지닌 젊은이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183쪽)”을 보여준다.

직업과 결혼연령 간의 관계는 출생신고 자료와 보사연 자료에서 분석되었다. 우선 출생신고자료는 IMF 경제위기가 여성보다 남성의 결혼연령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준다. 남성, 특히 농어업과 단순노무직 종사자 및 상층계층의 고위관리직과 전문가 집단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결혼연령의 상승현상은 모든 직업 집단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민감한 변화를 보인 집단은 농업직, 단순노무직과 아울러 상위계층의 화이트칼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자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154쪽).” 이에 대해 저자는 농업직과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불균형한 성비가, 그리고 상위계층의 화이트칼라는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결혼 연령을 높였다고 말한다. 보사연 자료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 남녀 상관없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결혼한 사람들일수록, 고학력과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거주지에 따른 결혼 연령분석도 출생신고 자료와 보사연 자료에서 행해졌다. 출생신고자료는 결혼연령이 거주지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결혼 연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드러진 형태를 보이지 않지만, 2004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와 경기도 및 제주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과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편의 결혼 연령은 1990년 이후 대구에서 상승속도가 상대

적으로 빨랐다. 부인의 결혼 연령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규모가 커지거나 수도권일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1990년 이래 전라남도의 결혼연령이 가장 낮게 유지되어 왔다.

결혼에서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분석은 보사연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집단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첫출산 간격이 길어지는 반면, 1997년 이후에 결혼한 초혼자 집단에서는 학력이 낮아질수록 첫출산 간격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에서 출산수준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편의 직업에 따른 첫출산분석(특히 1997년 이후의 초혼자 집단)에서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첫출산간격도 길어진 반면, 블루칼라 혹은 단순노무직과 농업종사자의 첫출산 간격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연령과 첫출산간격 간의 관계를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집단과 이후에 결혼한 집단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고, 저자는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단계로의 진입이 결혼 후 출산의 지연보다는 결혼 연령의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192쪽)”는 결론을 내린다. 또 부인의 결혼연령이 28세 이상, 남편의 결혼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서면 첫출산간격이 급격하게 길어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달리,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조사 자료의 첫 출산을 사건사 분석으로 분석한 이성용(2006)의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첫 출산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부인의 혼인연령과 출생코호트는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외환위기이후의 첫출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8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것이다. 먼저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의 인구정책을 소개한 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이 기본계획은 한국사회의 초저출산이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결혼관과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진단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의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3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222쪽).” 이 기본계획은 육아시설 확장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여성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을 지향한다.

저자는 이러한 인구정책에 대해 이 책의 앞부분에서 분석한 내용들과 결부시

켜 그 타당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녀양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출산장려정책들이 출산수준을 높이는 데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207쪽).” 또한 논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는 안정되고 좋은 직장의 여성을 위한 정책이지, 남성과 더불어 상부상조하여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불안정한 직장의 여성이나 전업주부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나 유럽국가에서도 각종 출산보조금,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가족친화적 작업환경개선, 신축적인 노동시간과 노동기회의 부여와 같은 인구정책이 출산력을 높이는데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을 고려해 볼 때 실현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정책은 출산장려정책이라기 보다 이미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육아를 위한 것이다.

저자는 청년실업의 해소와 직업 안정성에 대한 확인이 저출산의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최근 한국의 출산수준 저하는 IMF 경제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20대 청년인구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데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한정된 가용 재원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 정책의 초점을 청년인구가 빨리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유인하는 데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209쪽).” 게다가 2005년 보사연의 전국출산력 조사 분석을 통해, 첫출산에 남성의 안정된 직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의 안정된 직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이성용(2006)의 연구도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보육정책이 아니라 청년실업의 해소와 직업 안정성에 대한 정책이 2000년대 초출산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다양한 자료들과 분석결과를 통해 보여준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서의 전반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책은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여준다.

Ⅲ. 나오는 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몇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미시적 자료와 거시적 환경 간의 연계를 다룬 최근의 이론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카드웰(Caldwell)을 인용하면서 개인의 소득과 출산간의 관계가 거시적 차

원의 사회경제적 변동,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미시-거시 혹은 거시-미시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출산이론들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다. 특히 외환위기란 거시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외환위기 이전에 형성하고 있던 개인의 소득과 출산 간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기존의 관계와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음을 감안하다면, 그러한 이론적 설명의 미비는 이 책의 커다란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자는 2000년대의 초저출산에 “가치관과 태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선택,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70쪽)”과 더불어 IMF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70쪽).” 요컨대, 한국의 초저출산에는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서구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출산의 하강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계와 사회복지학자들은 개인주의적 측면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출산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가족계획정책, 특히 낙태와 피임을 활용한 출산억제정책에서는 인구정책의 이해관계와 여성운동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페미니즘접근방식의 인구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오늘날 출산장려 인구 정책은 페미니즘 접근방식과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Hodgson and Watkins, 1997). 따라서 여성의 인권을 출산보다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인구정책은 출산을 상승대신 오히려 하강시킬 위험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성용 (2006) “저출산과 경제위기” 《한국인구학》 29(3): 111-137.
 Hodgson, D. and S. C. Watkins (1997) “Feminists and Neo-Malthusians: Past and Present Allianc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 469-523.